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2호 (2023.0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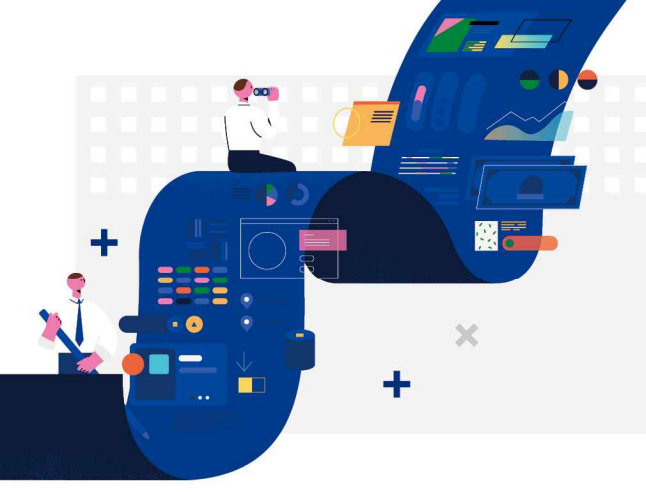
■ 이 슈

(경제) 최근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점검

■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2호 (2023.09.22)

Cotents

I. 이 슈

(경제) 최근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점검 1

II.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11

(산업) 소상공인 발목 잡는 150대 규제, 신속 개선 추진 11

(교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 12

(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나눔' 신청 접수 12

(산업)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예정...표준계약서도 마련 13

(기술) 과기정통부, 'S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발표 13

(복지) 출산·양육에 따른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14

(금융) DSR 산정방식 조정을 통한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경제

최근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점검



#경제 #가계부채 #위험성 #경제위기

- 최근 국내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한 주택자금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리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에 따른 위험이 증대
 - 가계부채는 가계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평활화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도할 경우 민간소비 위축과 더불어 자산가격 하락, 소득 감소, 저소득 차주의 부담 증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지난 9월 6일 IMF는 국내 경제 연례협의를 마무리하며, 한국경제는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 기간에 드러난 금융 부문의 취약성과 증가한 금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정부 및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
 - 지난 9월 13일 금융위원회 주재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 변경 및 은행권 대출심사체계 강화 등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이에 이번 호에서는 현재 인천시의 가계부채 현황 및 증가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인천시 가계부채 위험성과 더불어 지자체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전국)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¹⁾에 따른 2023년 2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약 1,749조 원으로, 2023년 들어 증가세가 둔화한 전기대비 0.6% 증가,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한 수준
 - 전체 가계대출의 약 59.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2분기 기준 전기대비 0.5%,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약 1,031조 원 수준으로,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의 경우 전기대비 1.3%,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한 약 718조 원 수준으로, 2021년 3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
 - 전체 가계대출의 약 70.0%는 예금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는 예금취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30.0%는 보험회사,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타금융기관에서 취급
 - 2023년 2분기 말 전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전기대비 0.2%,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 약 1,223.7조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대비 예금취급기관 대출액 비중은 2019년 4분기 이후 감소세
 - 기타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2023년 2분기 기준 전기대비 2.5%,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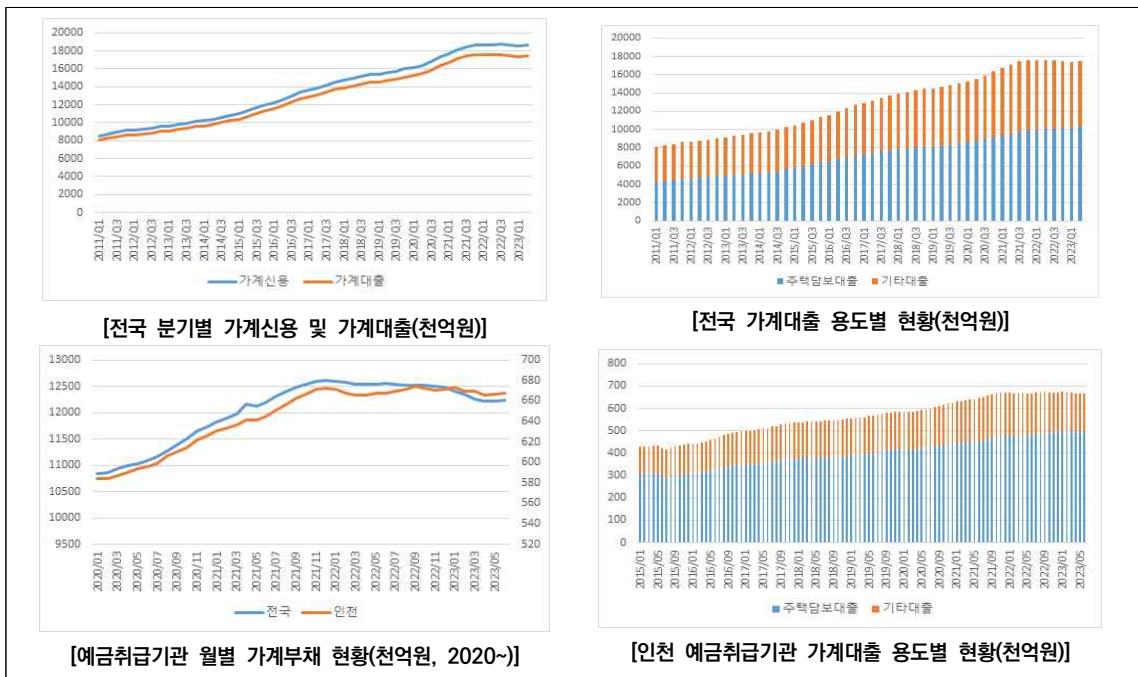
1) 가계신용 통계의 가계신용은 가계대출 및 판매신용으로 구분. 가계신용의 약 93.9%를 가계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이외 판매신용의 경우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등의 외상판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음.

525.1조 원 수준

- 2023년 6월 기준 전국에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2.3%), 인천(-0.1%), 부산(-1.5%) 순이며, 같은기간 전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1.2%), 충북(0.5%), 서울(0.3%) 순

○ **(인천)** 인천시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급등기('19.하반기~'22.상반기) 동안 이전('19.06) 대비 17.4% 증가한 66.8조 원에 이르렀으나, 2022년 7월 이후 조정기에 들어서며 2023년 6월 말 현재 최고점('22.07) 대비 0.3% 감소한 66.7조 원 수준

- 2023년 6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인천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국내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의 약 5.5% 수준인 약 66.7조 원으로,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 2023년 6월 기준 인천시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한 약 50조 원, 기타대출은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10.5% 감소한 약 16.7조 원으로 기타대출의 감소가 가계대출 총액 증가 둔화에 기여
- 인천지역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전국 추이와 다르게 2021년 12월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
 - 2023년 6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보유 가계대출 잔액의 2021년 6월 대비 증가율은 대구(5.8%), 서울(4.4%), 인천(3.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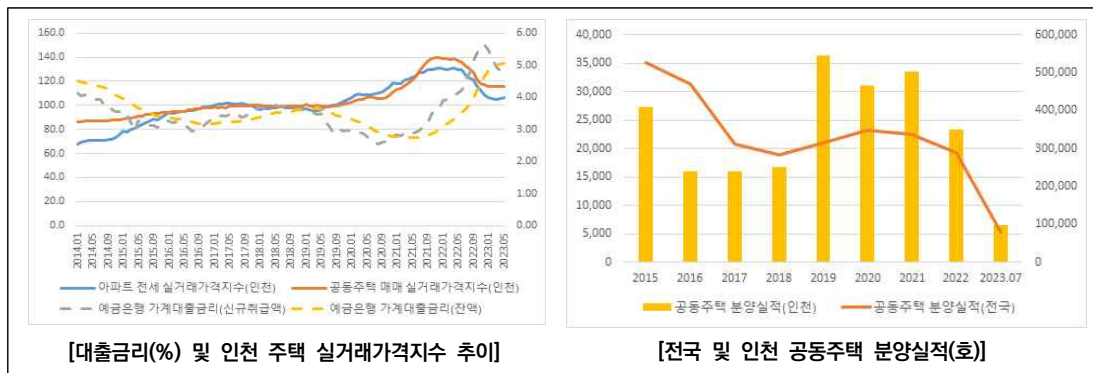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참고 및 재구성

* 주 : 예금취급기관 월별 가계부채 현황의 오른쪽은 인천 기준, 왼쪽은 전국 기준으로 작성

[그림 2] 국내 및 인천 가계대출 추이

○ 국내 가계부채는 자산시장(부동산)과의 연관성이 높은 편으로 2015년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빠르게 증가해왔으나, 2022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 둔화와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며 조정기에 진입²⁾

-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는 2015년 이후 △낮은 금리 수준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투자심리) △주택공급 물량 증가 등 3가지 요인에 의해 상승세가 두드러지기 시작
 - 국내 기준금리가 2012년 상반기 3.25%에서 2016년 6월 1.25%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동안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동반 하락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 같은 기간(19~) 주택공급물량이 증가하며 차입비용이 감소한 가계의 투자 유인이 확대되었고,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낮은 수도권³⁾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활황을 이루며 가계의 자산과 대출이 동반 증가
- 2021년 하반기 이후 낮은 금리수준과 임대차법으로 인한 수요에 힘입어 단기간 급상승했던 주택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내 금융당국이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주택구입 비용 부담이 높아지자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둔화
 - 다만, 최근 △주택시장 침체 △주택건설 안전성 검사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의 허가·착공·분양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가계부채가 추가적인 증가 가능성 존재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가통계포털(KOSIS)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전세 및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2017년을 100으로 하는 계절조정지수 원자료 값을 이용하여, 왼쪽을 실거래가격지수, 오른쪽을 대출금리 기준으로 작성

2 :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왼쪽을 인천, 오른쪽을 전국 기준으로 작성

〔그림 2〕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및 인천 주택시장 현황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국 및 인천의 평균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과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DTA와 LTI는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을 판단할 때 이용되는 지표 중 하나로, 가계의 자산 및 소득과 비교한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지표
 - DTA는 일반적으로 100% 초과 시 고위험가구로 분류하며, DTA 100%란 가계가 보유한 총자산가격이

2) 인천시와 전국의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상황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음. 인천시 주택 가격지수 및 공동주택 분양실적에 대한 정보는 [그림 2] 참조.

3)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른 2021년 말 등록센서스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2, 지방 107.4, 수도권 96.8, 인천 97.5 수준.

총부채액과 같은 수준이라 모든 자산을 처분해야지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LTI는 주로 금융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총량적인 개념의 유럽식 규제방식⁴⁾으로 국내에서는 LTI를 일정 비율로 정해 강제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 LTI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에서는 가계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부채 임계수준을 약 382.7% 수준으로 추정
- **(인천)** 2022년 말 기준 인천시 가계의 평균 DTA는 20% 이하 수준으로 자산 측면의 채무상환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평균 LTI는 증가하는 추세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22년 말 인천시 가계의 평균 DTA는 19.3%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하며 총부채에 대한 자산 측면의 부담이 감소
- 2022년 말 인천시 가계의 평균 LTI는 약 152.0%로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인천시 가계 LTI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평균은 약 4.1% 수준
- **(전국)** 2022년 말 전국 가계의 평균 DTA 및 LTI는 2021년 대비 4.6%, 0.5% 감소한 16.7%, 143.0% 수준으로, 가계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편
- 2022년 말 전국 가계 LTI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최근 5년('18~'22)간 평균 약 2.0% 수준으로, 전국 가계의 평균 LTI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

○ 2022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출금리 역시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및 인천시 가계의 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⁵⁾이 증가하는 추세

- **(한국은행)** 2023년 6월 기준 전국 및 인천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⁶⁾은 각각 0.33%, 0.20%로 2022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8% 내외) 및 2009년-2019년 장기평균(0.54%)을 하회
- 2023년 6월 기준 전국 및 인천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역시 각 0.22%, 0.18% 수준으로, 증가세를 띄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상황
- 2023년 6월 기준 전국 은행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대출 연체율은 각각 0.3%, 1.5% 수준으로, 전월대비 각각 0.1%p, 0.2%p 감소
- **(KCB⁷⁾)** 2023년 7월 기준 집계자료에 따른 전국 및 인천시 연체율은 1.1%, 1.06% 수준으로, 본격적인 금리상승이 시작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⁸⁾

4) ①영국 영란은행(BOE)은 연간 주택담보대출이 1억 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신규 주담대 중 LTI 450% 초과 대출 건수가 전체 주담대 건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 ②노르웨이는 주택담보대출시 LTI 500% 한도 규제 ③덴마크 주택담보대출시 LTI 400% 이하 제한 ④스웨덴은 주택담보대출 시 LTI 450% 이상 차주에 상환액 인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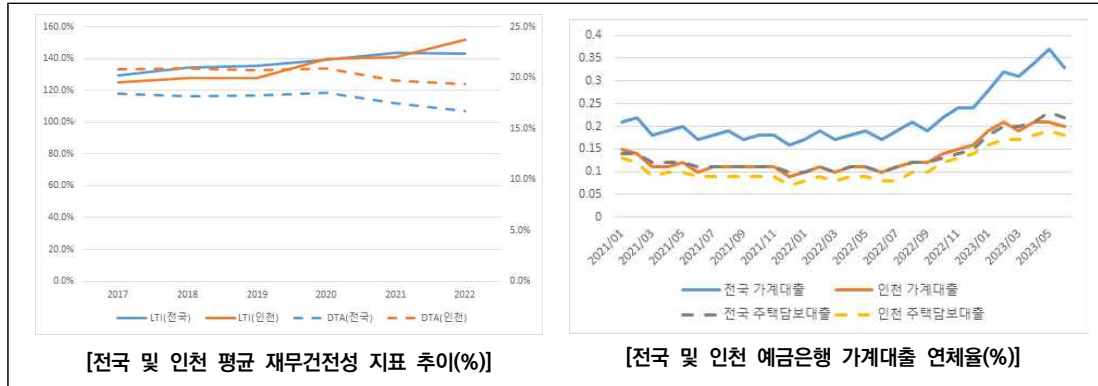
5) 연체율 = 연체대출금/연체산정 대상 대출금.

6) 다만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2023년 3월말 기준 0.5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8% 내외)에는 못미치나 장기평균(0.40%)보다는 높은 상황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직 장기평균과의 비교는 어려우나 2023년 3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이 0.77%로 시중은행(0.30%) 및 지방은행(0.55%)보다 높고 증가속도도 빨라 유의할 필요.

7)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에서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통해 KCB가 보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융합정보의 ①시도별 집계자료와 ②인천시 인구의 약 5%를 표본추출한 가명자료를 구입하여 동향 작성 및 연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KCB 집계자료는 시도별 집계자료를, KCB 개인자료는 5% 표본추출한 개인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의미.

8) 연체율 = 연체금액/대출잔액.

- KCB 집계자료에 따른 연체율은 예금취급기관 뿐만 아니라 연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 금융기관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연체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연체율 증가세는 전국 0.8%(‘22.08) → 1.1%(‘23.07), 인천 0.73%(‘22.08)→1.06%(‘23.07) 수준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가계금융복지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 : 재무건전성 지표 추이의 왼쪽은 'LTI' 기준, 오른쪽은 DTA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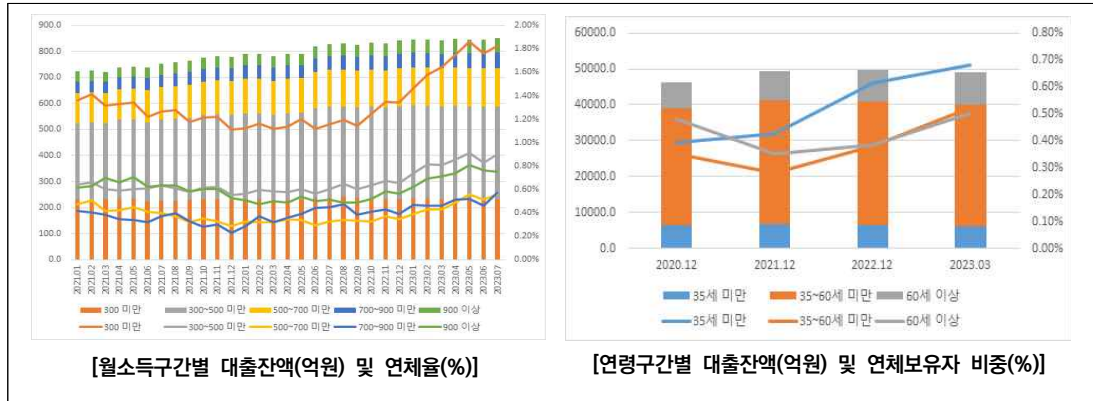
〔그림 3〕 가계 재무건전성 지표 및 연체율 추이

- KCB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지역 가계대출의 차주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년~'23년 사이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이 가장 높은 저소득·저연령 차주의 대출잔액이 빠르게 감소
 - KCB 집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인천시의 지역 인구 대비 대출보유자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소폭 감소한 약 38.8%이며, 대출보유자의 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약 8,541만 원 수준
 - 지역 전체 인구 대비 연체보유자 비율은 약 2.6%, 대출보유자 대비로는 약 6.8% 수준으로, 2021년 1월 대비 각각 0.4%p, 1.2%p 증가
 - (월소득구간) KCB집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연체율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월소득액이 적은 차주일수록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⁹⁾
 - 7월 기준 대출잔액은 약 85조 원으로 월소득 구간별 비중은 '2구간(41.7%)', '1구간(27.4%)', '3구간(17.5%)', '4구간(7.1%)', '5구간(6.4%)' 순
 - 소득구간별 대출잔액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5구간(18.3%)', '4구간(11.7%)', '3구간(5.7%)', '2구간(1.5%)', '1구간(-2.6%)' 순
 - 7월 기준 총 연체잔액은 약 9천억 원 수준으로, 월소득구간별 연체율은 '1구간(1.83%)', '2구간(0.90%)', '5구간(0.75%)', '4구간(0.57%)', '3구간(0.56%)' 순
 - (연령구간) KCB 개인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연령별 대출액은 2022년 4분기 대비 '35세 미만' 및 '35~60세 미만' 집단에서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집단에서는 증가
 - 연령구간별 대출잔액 비중은 '35세~60세 미만(69.0%)', '60세 이상(18.3%)', '35세 미만(12.7%)' 순이며,

9) 월소득구간을 임의로 구분하여 1구간~5구간으로 표기함. 구간별 금액은 다음과 같음. 300만 원 미만(1구간), 300만 원~500만 원 미만(2구간), 500만 원~700만 원 미만(3구간), 700만 원~900만 원 미만(4구간), 900만 원 이상(5구간).

대출잔액의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60세 이상(2.3%)', '35~60세 미만(-1.0%)', '35세 미만(-5.7%)' 순

- 2023년 1분기 기준 연령별 연체율은 '35세 미만' 0.68%, '35세~60세 미만' 0.52%, '60세 이상' 0.50% 수준으로 모든 연령구간에서 증가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가계금융복지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 : 소득구간, 연령에 따른 잔액 및 연체율은 오른쪽은 '대출잔액' 기준, 왼쪽은 '연체율'을 기준으로 작성

[그림 4] 연도별 인천시 소득구간 및 연령별 대출잔액 및 연체 추이

- 한국은행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가계부채의 감소전환('23.1/4 기준 전년동기비)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의 개선세('22.1/4~) △취약차주¹⁰⁾ 비중 유지('23.1/4 5.1%) △낮은 연체율 수준(금융위기 및 장기평균 이하)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대응력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 ①저소득 다중채무자 중심의 취약차주 연체율 ②30대 이하 차주의 연체 가능성 ③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등으로 인해 당분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적절한 대손충당금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코로나19 조치 정상화 △부동산 시장 불안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산적해 있으므로, 인천시는 대출 및 연체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교육 △정책대출상품 개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취약차주 중심의 지원을 수행할 필요
 - 가계부채에 대한 통제 및 관리는 대체로 △DTI, DSR 등의 대출 규제 △금융기관 수익 유인 변화 △금융기관 위험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금융당국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다수
 - 인천지역 대출 차주 또는 가계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가계(차주)의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하는 취약 가계(차주) 기준을 마련하여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
 - 청소년 및 청년, 고령층,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투자, 계약, 대출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금융 관련 상담센터 및 정책대출 상품 운영, 채무조정 절차 지원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

10) 한국은행의 취약차주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함.

서비스 >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액

- **(서비스생산)** 2023년 2분기 기준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국과 인천에서 모두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며, 경기의 개선세가 지속
 - **(전국)** 2023년 2분기 전국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5.3%,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115.7 수준
 - 인천(7.6%), 서울(6.6%), 대전(3.5%) 등은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등의 호조로 증가했으며, 제주(-1.7%), 세종(-1.4%), 강원(-0.3%)은 숙박·음식점업, 교육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감소
 - 서비스업 13개 업종 대부분의 생산지수가 100 이상으로 전기대비 증가한 가운데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은 2분기 연속 100 미만으로 집계되었으며, '교육 서비스업'은 전기대비 2.8% 감소
 - 전년동기대비 생산지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9.3%) △금융·보험업(9.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0%) 순
 - **(인천)** 인천의 2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5.1%,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 118.9로, 서울시와 더불어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빠르게 개선
 - 부동산 등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으나,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생산이 증가하며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개선
 - 인천의 전년동기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운수·창고업(40.9%) △보건·사회복지업(11.5%) △도·소매업(4.7%)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업(-10.0%) △숙박·음식점업(-7.4%) △정보통신업(-6.2%) 등에서는 감소
 - 운수 및 창고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증가한 효과가 반영되어 연속 5분기째 전기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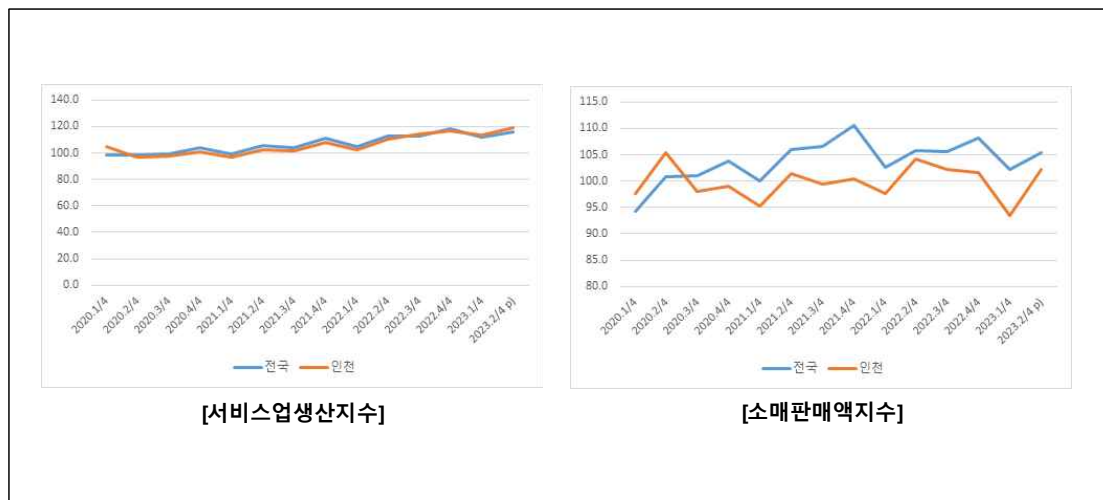
[표 1] 서비스업 주요 부문 생산지수

지역	항목	'22.4/4	'23.1/4	'23.2/4 (p)	'22.2/4	전기비	전년 동기비
전국	도매·소매업	110.2	106.7	107.0	108.0	0.3%	-0.9%
	운수·창고업	131.8	125.6	134.1	122.7	6.8%	9.3%
	숙박·음식점업	125.9	115.8	120.8	124.1	4.3%	-2.7%
	금융·보험업	122.5	124.2	126.4	115.7	1.8%	9.2%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182.5	144.0	187.8	175.5	30.4%	7.0%
인천	도매·소매업	108.3	106.0	109.5	104.6	3.3%	4.7%
	운수·창고업	137.5	146.6	166.0	117.8	13.2%	40.9%
	숙박·음식점업	119.8	104.2	109.5	118.3	5.1%	-7.4%
	금융·보험업	116.5	114.4	115.7	107.2	1.1%	7.9%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222.0	180.8	192.0	179.8	6.2%	6.8%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비율(%)로 표기

2 : 각 자료는 산업별,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불변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및 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소매판매액지수의 전국자료는 '재별 및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의 불변지수를 사용

[그림 1] 서비스산업 동향 추이(2023년 2분기)

- **(소매판매)** 2023년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실질임금 감소,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슈퍼마켓·잡화 △편의점 △전문소매점을 중심으로 판매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 **(전국)** 전국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3.0% 증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한 105.4로 감소세는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 생산에 비해 더딘 회복세
 - 2023년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9개 지역에서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105 수준으로 유지
 - △제주(-7.4%) △대구(-5.0%) △전남(-4.9%) △광주(-4.6%) 등 네 곳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5.4%) △부산(4.6%) △전북(3.3%) 순
 - **(인천)** 2023년 2분기 인천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9.3% 증가,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한 102.2로, 2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
 - 면세점 지수 및 대형마트 지수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199.0%, 7.3% 증가했으나, 소규모 점포의 소매판매액이 전반적으로 감소

[표 2] 전국 및 인천 업종별 소매판매액지수

지역	항목	'22.4/4	'23.1/4	'23.2/4 (p)	'22.2/4	전기비	전년 동기비
전국	백화점	138.7	127.4	140.0	135.7	9.9%	3.2%
	대형마트	92.0	93.7	91.5	90.3	-2.3%	1.3%
	면세점	107.1	70.6	77.5	102.5	9.8%	-24.4%
	슈퍼마켓 및 잡화점	85.1	88.4	89.0	87.8	0.7%	1.4%
	편의점	109.5	95.0	107.4	112.0	13.1%	-4.1%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110.4	100.7	108.7	102.0	7.9%	6.6%
	전문소매점	103.9	105.8	104.9	106.4	-0.9%	-1.4%
	무점포소매	115.9	110.3	111.5	111.2	1.1%	0.3%
인천	대형마트	86.3	90.6	95.9	89.4	5.8%	7.3%
	면세점	134.8	169.8	214.7	71.8	26.4%	199.0%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95.2	81.9	88.8	97.6	8.4%	-9.0%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99.2	92.0	105.6	108.7	14.8%	-2.9%
	전문소매점	105.3	93.7	95.8	105.1	2.2%	-8.8%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 : 각 자료는 시도별, 소매업체별 판매액지수 중 불변지수를 사용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3.08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99,980	-16.3	148,787	-15.6	48,807	15,915	0.6	17,672	-13.7	1,757
자동차	15,880	-27.4	69,964	21.1	54,084	1,146	-16.8	5,282	11.8	4,136
기계장비	47,407	-19.4	56,554	4.3	9,147	4,164	-1.4	4,365	-2.5	201
바이오-의약	8,019	23.8	3,693	-37.1	-4,326	681	109.5	2,070	-51.8	1,389
바이오-화장품	1,826	-4.8	6,795	11.5	4,969	22	-25.3	1,553	-4.5	1,531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경제

정부,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진행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누적된 물가·금리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내수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

분야	주요 지원사항
성수품 물가안정	• 20대 성수품 물가 전년대비 △5% 이상 낮게 관리 및 성수품 역대 최대 16만 톤 공급 • 역대 최대 670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 전통시장 환급행사 및 간편환급시스템 도입 • 혼합 선물세트 공급, 축산물 등 금년 저렴한 품목으로 소비 분산 • 물가안정TF,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등 대응체계 가동
민생부담 경감	• 주거지원 강화, 건보료 부담 경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등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확대 • 9~10월 사업주·근로자 체불 용자 금리 인하, 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역대 최대 43조 원 신규 공급 • 유류세 인하,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 2개월 연장 • 집중호우 종합복구계획에 따른 복구자금 신속 집행
내수 활성화	• 10월2일(월)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 기간(9.28~10.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숙박쿠폰 60만 장으로 2배 확대 및 조기 배정, 제2차 Korea Duty Free Festa 및 중국 모바일페이 사용 확대 등 국내·방한 관광 활성화 • 온누리 상품권 9월 구매 한도 한시 확대,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카드 무이자 할부

산업

소상공인 발목 잡는 150대 규제, 신속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판로, 사업화·신기술, 환경, 보건의료, 인력, 입지·업종, 금융, 현장 애로 등 8개 분야의 150대 규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
- 소상공인 대상의 경우 소상공인의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28개 규제의 인정 범위 확대 및 개선을 추진
 - 창업·벤처 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규제'에 묶여있는 상황으로, △신기술 관련 인증기준 마련 △분산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 58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 추진
 - 중소기업의 경우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비용·시간 부담 등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64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
 - 보행자,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과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계도 △우회전 신호등 추가 설치 △보행자 우선도로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추가 조성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 예정
 -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버스업체 안전점검 △전세버스 불시점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등 최근 이동량 증가에 따라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버스 및 고속도로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 관리할 예정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시가 자동 선별 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추후 단속에 활용할 계획
 - 한편, 화물차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금번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기술나눔' 신청을 접수할 계획
 - 산업부는 2013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
 - 올해는 포스코(276건), 한국수력원자력(27건), 한양대학교(11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6건) 등 14개 기관이 기술나눔에 참여하여 총 593건의 특허를 나눔할 예정
 -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
 - 금번에는 첨단미래기술 및 ESG와 관련한 5개 분야의 특허에 대한 기술나눔이 예정

기술분야	첨단미래기술			ESG		계
	첨단제조·차세대통신	스마트시티	바이오·의료기기	에너지	친환경·자원	
건수 (비중)	283건 (47.7%)	93건 (15.7%)	18건 (3.0%)	154건 (26.0%)	45건 (7.6%)	593건 (100.0%)

#공정거래위원회

- 지난 9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해 마련한 표준연동계약서와 함께 연동제 관련 인센티브를 발표
 -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공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등락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
 - 중기부와 공정위는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 거래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
 -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중기부와 공정위가 연동제 도입 기업의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에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
 - 계약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함께 배포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줄 것과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교육 및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의 후속조치로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발표
 - 동 계획에서는 △워크플로우별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 △미디어·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3대 정책과제로 하여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

정책과제	주요 내용
워크플로우별 AI접목과 디지털 전환	• (기획) 생성형 AI를 통한 미디어·콘텐츠 창작 • (제작) 버추얼 프로덕션(초실감 가상제작)을 통한 제작비용 절감, 디지털 휴먼 이용 활성화 • (후반제작) 해외 진출을 위한 AI 기반의 번역·자막·더빙 • (마케팅 및 유통) 이용 데이터 확보를 통한 맞춤형 추천, 불법유통 사이트 대응 자동화
AI 및 디지털 인재 양성	• 향후 3년간 약 1,500여 명 인재 양성 - (신규) 청년 대상의 기업 연계 교육, 인턴십 제공 - (재직) AI·디지털 전문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기술 특화 플래그십 프로젝트	• 미디어·콘텐츠-AI 기업 컨소시엄의 대형·글로벌 지향 프로젝트 (기획개발, 제작, 해외진출 통합 지원)

복지 > 출산·양육에 따른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교육부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
 - 보건복지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부모급여액을 상향 조정
 -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 35만 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액이 10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되며, 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별도 지급
 -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
 - 동 실천방안에 따라 △지역별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 교류 △시설 개선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급·간식비 추가지원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예정
 - 또한 △지역별 유아학비 일부 지원(하반기)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24~) △거점형 방과후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금융 > DSR 산정방식 조정을 통한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



#금융위원회

-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축소될 예정
 - 9월 13일부터 50년 만기 대출에 대한 DSR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되어, 대출한도 역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해질 예정
 - 금융당국은 대출한도와 만기 설정에 있어 현재·미래의 소득을 감안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방침이며,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 취급 시 과잉대출이나 투기수요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
 -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예정
 - 또한 9월 27일부터는 연소득 1억 원, 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의 대출차주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며, 일시적 주주택자 역시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할 예정

참고 자료

- IMF, “IMF Staff Completes 2023 Article IV Mission to Republic of Korea”, 2023.09.06.
- 금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2023.09.13.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신용(분기)’, ‘지역별 여수진(말잔)’.
- 국가통계포털(KOSIS),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주택건설 분양실적(공동주택)’, ‘(新)주택보급률’.
-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예금은행 지역별 연체율’.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융합정보 집계 및 가명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2.06 & 2022.12 & 2023.06.
- PWC 삼일회계법인, 「금리 인상 시, 부채 점검:(1부) 가계부채」, 2022.09.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23.04.28.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락처 방안”, 2023.07.17.
- 주택산업연구원, 「2022년 주택시장 전망」, 2021.12.
- 통계청, “분기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2023년 2/4분기)”.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기획재정부,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2023.08.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발목잡는 골목규제 등 150대 킬러규제 선정…신속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2023.09.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하반기에 고속도로 법규위반 잡아내는 AI 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 2023.09.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 593건 무료 제공…‘기술나눔’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2023.09.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납품대금 연동제 표준계약서 마련…내달 4일부터 연동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23.09.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디지털 미디어 인재 1500명 양성…“AI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9.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원·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2023.09.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추진”, 교육부, 2023.09.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DSR산정 ‘최장 40년’으로 축소”, 금융위원회, 2023.09.13.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2호(2023.09.22)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09월 22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